

# 서울중앙지방법원

## 판 결

사 건 2021가단5239250 손해배상(기)  
원 고 1. A  
2. B  
3. C  
4. D  
피 고 대한민국  
변 론 종 결 2022. 6. 13.  
판 결 선 고 2022. 7. 11.

## 주 문

### 1. 피고는,

가. 원고 A에게 40,452,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7. 5.부터 2022. 7. 1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,

나. 원고 B에게 20,000,000원, 원고 C, D에게 각 1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. 7. 5.부터 2021. 9. 1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%는 원고 A이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, 원고 B, C,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16,167,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7. 5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은 2020. 7. 4. 18:46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 한강변(김포대교 북단 부근, 이하 '이 사건 사고지역'이라 한다)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가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, 지뢰가 폭발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혈흉 및 혈심낭,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.

나.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, 원고 C,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.

다. 국립과학수사원의 폭발물 감정 결과, 감정물에서 TNT가 검출되고, 폭발부 토양에서 폴리아미드(멜라민-우레아계 수지) 성분의 수지 파편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폭발물의 종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-1 대인지뢰인 것으로 감정되었다.

라. 1) 이 사건 사고지역의 관할구역은, 2020. 7. 7.까지는 육군 제1군단 제30기계화보

병사단(2020. 12. 1. 해체)의 관할구역이었다.

2) 이 사건 사고지역의 관리주체는, 2018. 12. 12. 한강 철책제거사업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2018. 12. 11.까지는 육군 제9보병사단이었다가 2018. 12. 12.부터 경기도 고양시로 전환되었다.

마. 이 사건 사고 이후 2020. 9. 17.과 같은 해 9. 28.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이 사건 사고지역 인근에서 발견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### 가.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 여부

원고들은, '이 사건 지뢰는 국군이 매설한 것이므로, 피고가 군용 폭발물 유실 책임을 진다'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뢰가 국군이 매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,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지뢰인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나. 폭발물의 제거 및 위험방지 책임

1)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(헌법 제34조 제6항),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고(헌법 제5조 제1항),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관련 제반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바, 국군은 일단 피고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, 예견 및 회피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

인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·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.

2)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(이하 "지뢰지역"이라 한다)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, 이 사건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이 사건 사고지역은 위 지뢰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,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위와 같은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.

3) 갑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되어 강화도, 임진강변,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, 위와 같은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 사건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, 위 군인공무원들이 지뢰 수색,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4)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표지 설치, 지뢰 수색,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

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<sup>1)</sup>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

---

1) 제2조(배상책임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

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### 3. 책임의 제한

한편, 위 증거들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점, 이 사건 사고지역은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점, 원고 A은 위와 같은 출입 통제,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역에 출입한 점, 이 사건 사고지역에서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%로 제한한다.

### 4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#### 가.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(원고 A)

(1) 성별: 남자

(2) 생년월일: 1950. 6. 18.생

(3) 사고 당시 연령: 약 70세

#### 나. 일실수입

원고 A은 사고 이후 약 3년간 추가 가동연한(해당기간의 도시일용노임액 월 2,002,575원)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70세 이후로 3년간 추가 가동연한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일실수입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다. 치료비

수술, 입원비 10,167,750원 + 외래진료비, 약제비 1,906,610원 = 12,074,360원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7호증

#### 라.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

---

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$$12,074,360\text{원} \times 0.7 = 8,452,052\text{원}$$

마. 위자료

이 사건 사고의 경위,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, 상해의 정도,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, 원고들의 위자료를 원고 A 32,000,000원, 원고 B 20,000,000원, 원고 C, D 각 10,000,000원으로 정한다.

바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40,452,052원(= 8,452,052원 + 32,000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2020. 7. 5.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7. 11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원고 B에게 20,000,000원, 원고 C, D에게 각 1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. 7. 5.부터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. 9. 10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, 원고 B, C,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최성수